

요구 다 들어줬는데…젤렌스키, 푸틴쪽 기우는 트럼프에 좌절

광물협정·조건없는 휴전 수락
트럼프 ‘협상 먼저’ 러에 동조
우크라, EU에 러 제재 강화 요청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3년을 넘긴 우크라이나전의 포성을 멈추기 위해 미국 측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 방식이 젤렌스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의식해 그가 제시해온 제안과 요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화답해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조건 없는 휴전안’을 즉각 받아들였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자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면서 튀르키예로 이동하기도 했다.

올초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광물 협정’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체적으로 불평등한 거래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결국 사인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중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와는 한참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푸틴 대통령과 2시간 통화 이후, 즉각적인 휴전보다는 협상이 먼저라는 러시아 측의 종전 논의 방식에 쏠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내건 ‘무조건 휴전’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자 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바티칸의 협상 참여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예 협상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러시아가 ‘조건 없는 휴전안’을 거부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만을 입에 올렸을 뿐 실제로 추가 제재를 단행하지 않았다.

WSJ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휴전이 가능하다”는 러시아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속국이 된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젤렌스키 대통령 질책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당시 백악관에서 모욕을 견딘 대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라고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열린 장례 미사를 계기로 바티칸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대면뿐이었다고 WSJ는 덧붙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알바니아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유럽 정상들. 연합뉴스

미국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더 강력한 대러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자산 압류, 러시아산 석유 구매자 제재 등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대규모 추가 조치 요구를 담은 백서를 다음주 유럽연합(EU)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백서에서 EU에 제재 대상자들

의 자산 압류 절차를 가속화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법안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러시아를 돕기 위해 EU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러시아 석유 구매자에 대한 2차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제재는 유럽이 지금까지 꺼려왔던 중대 조치로, 인도와 중국 등 러시아 원유 주요 수입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EU가 대러 제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규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은 대러 제재에 거리를 두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 후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해 ‘지금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고 싶지 않고 대화가 이뤄질 시간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미 ‘트럼프 뇌물’ 논란 카타르 항공기 인수

5,500억원 상당 보잉 747-8 기종

미국 국방부가 ‘부적절한 선물’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타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 용도로 제공하겠다고 한 호화 항공기를 인수했다.

선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국방부 장관은 모든 연방 규칙과 규정에 따라 카타르로부터 보잉 747 항공기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와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국방부는 미국 대통령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되는 항공기를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이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개조 작업을 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동을 순방하면서 방문한 카타르의 왕실로부터 가치가 약 4억 달러(약 5천500억원)로 추산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전용기로 사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잉에 새 전용



카타르의 보잉 747 항공기. 연합뉴스

기를 주문했지만, 아직도 인도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된 전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 불만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항공기를 아무대가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지만, 외국 정부의 초고가 선물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민주당은 물론이며 ‘진정’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제기됐다.

선물 받은 항공기를 그대로 이용하면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대통령 전용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개조하려면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스마트 안경기술 복잡, 삼성과 협력 이유”

구글 CEO 글로벌 기자간담회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스마트 안경 분야 제품은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피차이 CEO는 이날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가 열리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체적인 스마트 안경 개발 역량에도 삼성전자 등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글은 콘퍼런스 첫날인 전날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안경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서는 것은

2013년 선보였던 구글 글래스를 2년 만에 단종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스마트 안경 개발에는 한국 선글라스 업체 전틀몬스터 및 미국 안경 브랜드 와비 파커도 참여한다.

그는 “우리는 항상 안드로이드(운영체제)에 대한 노력의 대부분을 생태계와 협력하는 데 투입해 왔다”며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XR(확장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구글(안경) 쪽 제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처럼”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삼성과 XR 헤드셋 개발도 협력하고 있으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삼성 갤럭시폰에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세 법안’ 미 장기국채 투매…30년물 금리 5% 돌파

재정 적자 우려…10년물도 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미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등(국채 가격 급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웍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5.09%로 전장 대비 12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30년물 수익률은 장중 한 때 5.1% 선에 육박하며 지난 2023년 11월 초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같은 시간 4.60%로 전장 대비 12bp 급등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남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 강경파를 압박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키운 게 미 국채 매도 압력을 키웠다.

앞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및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19일 한때 각각 5%, 4.5% 선까지 오르며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우려를 키운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

부터 의회가 메모리얼데이(현충일)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하원 처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KCT)는 메가 법안 초안을 분석한 결과 법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2조5천억달러(약 3,440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산한다.

앞서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며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증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등을 등급 하향 배경으로 꼽은 바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상 최초 11만달러 뚫었다…앨리 어디까지

‘안전자산’ 인식 강해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천400달러대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9천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을 뚫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여러 거래소 가격을 종합해 집계하는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으로는 현재 10만9천826달러를 기록해 11만달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비트코인은 이날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한 가운데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천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 비트코인

연합뉴스

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달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상원은 지난 1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반적인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키웠다.

연합뉴스